

2024 국정감사

與,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지적도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만 26개월 걸려 재판 시작 전 재판부 변경 요청 납득 어려워 부인 김혜경씨 언급에 野 불편한 기색 비쳐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는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가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통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과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김건희 여사 집중 공세 증인 불출석·거부 등 ‘난항’

행안위·국토위, 대통령실 불법 증축공사 의혹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 본격질의 지연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해 의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질의가 지연됐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 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술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계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탈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친한계, 첫 비공개 만찬... ‘당 위기의식·공멸 가능성’ 공유

의원 20여명과 2시간 30분간 진행 김건희 특검 이탈표언 “친한계 야나”

친한(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김형동·고동진·김재섭·박정훈·장동혁·진종오·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 윤석열계나 친 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

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을 우려했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